

장관후보자 7명 청문보고서 채택 '빨간불'

한국당 '채택거부'... 후보 전원 불발 초유의 사태 예고 문대통령, 채택 불발시 국회 송부 재요청 뒤 '임명' 주목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입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25~27일)가 모두 끝났지만 28일 현재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가 전무한 상황이다.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이 '부적격'이라는 입장이어서 장관 후보 전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김연철 통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물론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

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내달 1일까지 기다린 뒤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 대통령은 4월 10~11일 이내의 특정 일자를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런 재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

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이전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런 가운데 파국을 피하기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장관 후보자 4명 정도를 부적격 의견을 달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와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부 후보자를 1~2명 교체하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황교안, 김학의 동영상 CD 다 알아"

2013년 국회서 만나 직접 얘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28일에도 이어갔다.

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황 대표를 향해 "(김 전 차관의 동영상) CD를 같이 보지는 않았지요. 저는 당황해서서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지면서 자리를 뜨시던 그날 오후의 대표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있었던 2013년 3월 당시 황 장관을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동영상 존재를 언급하며 김 전 차관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얘기가. 박 후보자는 황 대표를 만난 시점을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40분"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2013년 3월 11일)하고 이틀이 지난 날이었다.

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도 "(2013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 법무장관께 제가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의 질의 답변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황 대표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황 대표가 사건을 묵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회 속기록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3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다 알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영선 위원장이) '(황 장관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서 최근까지 질문을 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김용환 전 경찰청장의 수사를 촉구했다"며 "거기에 보면 황 장관이 미묘하게 눈을 깜빡거리고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거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13년 6월 17일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 장관에게 "어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인데,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의겸 "靑 나가면 살 집...투기 아니다"

고가부동산 매입 논란 해명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재개발 구역 내 2층짜리 복합건물을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며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결혼 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고,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며 "제 나이에 나가서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건물 구입 배경을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재개발구역 내 건물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산 건물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를 나가면 달리 수익이 없기에 상가 임대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말순 노모가 혼자 생활하고 있다. 전세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기 쉽지 않아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인데, 저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자본시장 촛불혁명" vs 野 "연금사회주의"

국회복지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놓고 공방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조양호 회장 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이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공정한 주주권 행사로 잘못된 오너 경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연금사회주의'가 작동해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입장이 드러났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조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박탈에 대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상장기업을 흡사 개인 기업

인 것처럼 사유화해 온 잘못된 경영자에 대해 단죄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 "일각에서는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 라고도 하지만, 갈 길이 멀다"며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표가 등기이사로 남아 있고 최측근 집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이 유지된다는 분석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스튜어디스 코드 적용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주주 일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연금사회주의' 논란으로 빠진 데 대해 복지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에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가 갑자기 회의에 들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따졌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연금사회주의라기보다 장기적으로는 주주 가치를 높이고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과 절차에 따르고 있다"며 "기업 경영에 정부가 간섭할 의도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조두순법 등 비정점법안 16건

여야, 국회 본회의 열어 처리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점법안 16건을 처리했다. 특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조두순법)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신보라 의원 '아이 동반 국회 출석' 다음달로 미뤄질 듯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28일 "(아이 동반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출석과 관련해 답변을 미뤘다"며 "다음 달 5일 본회의의 동반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

앞서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 이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제안설명에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취지다. /박지경 기자 jkpark@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1652 point,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691749802, 878110002

J6 10 point, J5 8point, J3 6point, J2 5point, J1 4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